

정책과 청년의 삶을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 제4기 2030청년자문단 활동 시작

- 진천 청년마을에서 발대식 개최, 정책기획 단계부터 청년과 함께
- 기업인·의사·학생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행정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금), ‘청년마을 플랫폼 진천’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안전부의 정책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제4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참석하여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 청년세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과 개선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은 부내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상시적인 정책 자문 기구다.

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제4기 자문단은 청년 기업인과 비영리 단체 활동가, 지역 의사, 학생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로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행정 활동에 대해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AI 민주정부, 지방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각 부서와 소통하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살피는 ‘청년 영향평가’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내부 공무원 모임인 ‘혁신체인저’와 함께 외부의 시각에서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쌍방향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발표

발대식 현장에서는 각 분과가 고민해 온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직접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AI 민주정부 분과에서는 청년 개발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때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균형성장 분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하여 지역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국민안전 분과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세대 협력형 주민대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된 제안들은 앞으로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2030청년자문단의 열정적인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청년들의 혁신적인 제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든든한 정책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044-205-1461)
		담당자	사무관	정혜윤 (044-205-1460)
			사무관	임성진 (044-205-1470)

